

커먼즈와 인권 : 인권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정훈 (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단)

1.로빈 후드와 마그나카르타

잉글랜드 노팅엄 지역의 푸른 숲에서 전해진 영웅담이 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로빈 후드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이다. 헐리우드의 로빈 후드는 십자군 전쟁에서 귀환한 몰락한 귀족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로빈 후드 소설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하워드 파일의 『로빈 후드의 모험』(*The Merry Adventures of Robin Hood*)은 그를 싸구려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는 셔우드의 평민(commoner)으로 그리고 있다. 그런데 커먼즈와 인권을 다루는 글에서 로빈 후드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일까? 이는 로빈 후드의 이야기가 바로 커먼즈(common)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빈 후드는 헨리2세, 리처드 1세대, 존 왕의 시대를 살다가 인물이고, 셔우드의 숲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이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커먼즈와 관련이 있다. 로빈 후드 시대의 산림, 즉 숲(Forest)은 단지 나무가 밀집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숲의 의미에 대해서 마크 블로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식량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본능이 오늘날보다 더 표면에 드러났던 시대에는 아마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 숲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무를 구하러 당연히 숲에 갔는데, 이는 우리 시대의 기름, 휘발유, 금속보다 훨씬 더 삶에 필요한 것이었다. 나무는 난방과 조명(횃불), 건축자재(지붕널, 성의 말뚝), 신발(나막신), 쟁기손잡이 및 기타 다양한 도구들에 사용되었으며, 도로를 강화하는 장작단으로 사용되었다.(라인보우, 2012: 61-6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숲은 당시 평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infra)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평민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숲에 바탕을 둔 자급형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르만족 정복 이후 국왕은 숲을 자신의 소유로 선포하고 사슴이나 멧돼지에 대한 사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였다. 로빈 후드와 그의 동료들이 “귀족이든 수도원장이든 기사든 대지주든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약탈당한 대로 압제자들을 약탈하겠다고, 그들이 부당한 세금, 혹은 소작료, 혹은 부정한 벌금 등의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쥐어 짜낸 것을 도로 빼앗겠다고 맹세”(파일, 2018: 18)한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로빈 후드 이야기는 당시 잉글랜드 평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는 숲에 대한 권리를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이 제한하고,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왕, 귀족, 수도원장, 지주들에 대해 저항하는 커먼너들의 집합적 열망

이 담긴 이야기이다. 평민들에게 커먼즈로서 숲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권리의 물적 조건이었다.

하지만 결국 존 왕의 토벌군을 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로빈 후드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그런데 평민의 권리와 숲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로빈 후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잉글랜드의 국왕 존은 1215년 6월 중순 템스 강 근처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그 유명한 대헌장, 즉 <마그나카르타>의 조항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반포한다. 그리고 2년 뒤인 1217년 존을 이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헨리3세는 <마그나카르타>와 함께 또 하나의 헌장인 <산림헌장>(Carta de Foresta)을 승인한다. <마그나카르타>가 평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문서라면, <산림헌장>은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권리문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림헌장>은 오늘날 커먼즈의 이름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운동담론, 즉 사회혁신론으로부터 체제변혁론에 이르기까지 주목되고 있는 권리문헌이다.

산림헌장은 계급 기반의 진보였기 때문에 종종 공유인(common man/평범한 사람들-인용자)의 헌장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진정으로 급진적인 문서로서 자유민에게 생계수단에 대한 권리, 원자재에 대한 권리,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수준의 생산수단의 권리를 보장했다. (스탠딩, 2021: 32)

<산림헌장>은 잉글랜드의 오랜 관습이 보장해온 평민들의 자유와 생계의 권리가 숲이라는 커먼즈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공인한 것이다. 이는 물론 커먼즈를 제한하거나 독점하려는 지배자들과의 투쟁 끝에 얻어낸 성취이다.

<마그나카르타>와 더불어 <산림헌장>은 인권에는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헌장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¹⁾라고 선언하는 대신 “모든 자유민은 자신의 숲에 있는 매, 새매, 송골매, 독수리, 왜가리의 둥지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숲에서 발견되는 꿀을 가질 수 있다.”²⁾고 선언한다. 즉 생존수단의 박탈 금지라는 인권의 원칙을 선포하기 보다는 매, 새매, 송골매, 독수리, 왜가리의 둥지와 꿀이라는 구체적인 생존수단을 인민의 생활공간에 실재하는 커먼즈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권리에는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토대에 확보되어야 함을 두 헌장은 말한다.³⁾

현대 인권논의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두 “자유인 헌장들”(라인보우, 2012)에는 인권에 대한 ‘기준이행 접근방식’만이 아니라 ‘조건형성 접근방식’이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조건형성 접근방식은 인권의 실현을 “개별 인권 침해의 해결을 넘어 인권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1조 2항.

2) <산림헌장>13조. 이 헌장은 라인보우의 『마그나카르타 선언』에 부록으로 실려있다.

3) <마그나카르타>의 경우에는 이후 인신보호영장의 근간이 되는 유명한 39조만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성이 커먼즈-숲에서 생존을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스토버스)가 있음을 명시하는 7조가 권리의 물적 토대를 잘 보여준다.

4) 인권에 대한 기준이행 접근방식이란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각 국가 내에서 이행하는 것을 통해 인권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효제, 2018.)

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조건”(조효제, 2018:41)을 형성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입장이다. <마그나카르타>와 <산림헌장>에서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조건’이 바로 커먼즈인 것이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자유헌장’들에 담긴 커먼즈의 사상을 오늘날의 인권과 연결시켜 보자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물론 우리가 논하고자하는 커먼즈의 사상은 단지 <마그나카르타>와 <산림헌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이 두 헌장을 포함한 커먼즈의 역사와 현대 커먼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맥락에서 커먼즈와 인권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단지 사회권이라는 인권의 범주 내지는 영역에 새로운 권리항목을 추가하거나 사회권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전지구적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동이라는 구조적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제도적, 담론적 위기를 넘어서 인권의 달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가능성을 커먼즈 개념을 통해 모색해보기 위함이다.

2.인권의 조건들과 그 위기

1)국제 인권 레짐과 전지구적 케인즈주의

인권이 인간사회의 핵심적인 규범으로 부상한 것은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급변으로 인한 것이었다. 신분제를 골간으로 하는 구체제를 전복하는 프랑스혁명이 내세운 가장 중심적인 이념이 인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이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질서의 이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1945년 창립 이후 유엔은 그 다음해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창설하고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다. 이후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사회권 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자유권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권 규범의 기본 틀이 형성된다. 소위 ‘국제 인권 장전’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규약들 및 부속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이 규약들의 실행을 감독, 협의, 평가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국제 인권 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이 구축된다.

물론 국제 인권 장전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인권 기획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즉 이 문헌들이 “인권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법적인 준거점이자 도덕적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탈식민화의 모순과 미국 등 기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냉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프레초, 2020: 76) 그러나 국제 인권 레짐은 인권을 모든 국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표상’으로 자리하게 만들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에서 인권이 적어도 공식적인 중심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전후 자본주의의 성격과 연관

된 것이었다. 즉 국제적 케인즈주의 경제질서, 혹은 포드주의 축적방식의 성립이 국제 인권 레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중심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고임금체제,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공공지출 상승, 재생산비용의 사회화를 담보하는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질서가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협약, 자유권 협약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된 것이다.

2) 신자유주의와 국제 인권 레짐의 위기

그러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1970년대 국제적인 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케인즈주의 경제질서는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로 자리잡아가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전지구화된다. 다시 말해 국제 인권 레짐의 구조적 조건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사스키아 사센에 따르면 이 시대의 경제적 질서는 ‘축출’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여 작동하고 있다. (사센 2016.) 여기서 축출(expulsion)이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여역 밖으로 다수의 인구를 추방하는 과정이다. 구조화된 장기실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노동의 증가, 국가재정지출의 과도한 축소, 심화된 조세불균등, 소득불평등 구조의 공고화, 주택과 토지 그리고 자원의 금융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축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축출된 사람들은 기본적 생존조차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계와 삶의 계획,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퇴출되는 축출”(같은 책, 49)이 이루어져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개발논리에 의해 오염된 물과 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로부터 축출될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센은 파악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부터 축출된 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란 무엇일까?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들의 위상을 ‘잉여’, 보다 극적으로는 ‘쓰레기’라고 규정한다. (바우만, 2008.) 더 이상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별다른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들이 바로 잉여이며 쓰레기란 말이다. 바우만이 말하는 쓰레기란 실업자들, 자기고용이라는 방식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영세자영업자들,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범법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름이다. 언더클래스(underclass)라는 유명한 용어 역시 신자유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은 이들의 또 다른 명칭이다. 사회는 사실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⁵⁾

이러한 명칭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축출자본주의이건 신자유주의이건 다수의 인구를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체제에서 ‘축출된 사람들’, ‘인간

5) “우리가 사는 세계 중 통상 ‘사회’라는 관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 ‘인간 쓰레기’ (더 정확히 말하면 폐기된 인간)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바우만, 2008: 33)

쓰레기들’, ‘언더클래스’는 더 이상 사회적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배제된 이들의 저항을 예방 및 억압하기 위해서 치안적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한 양상을 포착하려는 개념적 시도들은 비판적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가령 법과 질서 중심 치안정책(Hall et al, 1978), 신자유주의 경찰국가(김세균, 2007), 전도된 전체주의(셸던 월린, 2013) 등등이 그러한 개념화 작업을 잘 보여준다. 바우만의 경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 안전 중심 국가’ (personal safety state)’라는 개념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국가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국가의 억압적 권력 행사는 그에 대한 대중들의 정당성 승인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바우만에 의하면 그러한 정당화는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그 불안의 원인을 체제의 구조적 성격이 아니라 손쉽게 표상 가능한 타자라고 인지하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삶의 안정성 확보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오늘날 “국가 권위를 대안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순종적인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현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형태로 모색되는 것”(바우만 2010, 29)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의 억압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국가를 바우만은 ‘개인 안전 국가’라고 규정한다. 개인 안전 국가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실업자와 빈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박탈당한 자들이 지목되며 그 국가는 이들이 주민들의 개인적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타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단지 낮은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자들이며 두려운 자들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유보하거나 중지하려 하며 공포에 빠진 대중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국 국제적 케인즈주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전 지구적 본격화 이후 다수의 인구들이 축출되어 쓰레기 또는 언더클래스가 되는 상황은 사회권의 심각한 박탈을, 신자유주의적 치안국가의 등장은 자유권의 중대한 제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인권 레짐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인권 장정의 기획은 또 다시 그 실현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3. 커먼즈 기반 인권론의 모색

1) 커먼즈의 삼항일조

커먼즈라는 개념이 우리 시대에 다시금 부상하게 된 맥락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의 세계적 전일화와 결부되어 있다. 실비아 페데리치는 커먼즈라는 “한물 간 것이 분명한 이 개념이 현대 사회운동의 정치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하게”(2018: 236) 된 역사적 계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최소한 1993년 12월 31일 사빠띠스따가 멕시코의 공유지를 없애는 법안에 저항하기 위해 산크리스토팔의 소칼로 광장을 점수한 이후로 ‘커먼즈’⁶⁾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도 급진좌파 사이에서 대중성을 획득하여 무정부주의자,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 생태주의자, 생태여성주의자가 모두 관심을 두는 수렴지점이 된 것 같다.(235-236)

즉 멕시코 치아빠스 라칸도나 우림(숲) 지대에서 커먼즈의 파괴에 맞서는 사빠띠스따의 봉기가 시작된 이후 다양한 양태의 좌파들, 급진주의자들, 해방적 정치 행위자들이 커먼즈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라는 현존했던 대안체제의 실패 이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시도와 세계 곳곳의 공통자원 및 비자본주의적 협력에 기초한 사회관계를 파괴하여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엔클로저의 신자유주의적 판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중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수렴이라 할 수 있다.(236)

그러나 급진적 사회운동만이 커먼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페데리치를 비롯한 많은 좌파 커먼즈 연구자,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커먼즈는 세계은행, 유엔의 개발 관료들, 미국의 정치인들, 주류 경제학자들, 거대 미디어 자본, 혁신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지배집단에 의해서도 주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페데리치, 2018. 권범철, 2020. 페데리치·카펜치스, 2020.)

즉 커먼즈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좌파적인 것이든 우파적인 것이든 커먼즈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폭력성, 즉 인간과 생태의 파괴와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의 파괴 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그와 같은 폭력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나아가려는가, 아니면 적절히 제어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가라는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커먼즈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커먼즈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⁷⁾ 커먼즈를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파악하는 현대 커먼즈 연구의 중요한 논의들은 커먼즈를 공유자원과 같이 재화의 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지양하고자 한다. 커먼즈는 단지 토지나 하천, 혹은

6) 한국어판에서는 역자가 commons를 공유재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commons에 대한 연구들은 commons가 단지 땅이나 재화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은 commons를 공유지, 공유재, 공통재, 공통자원 등과 같이 재화의 속성에 국한된 개념으로서 옮기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나 또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만 아직 commons의 의미를 적절하게 담아낼 번역어를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이 글에서는 음역하여 커먼즈로 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 성신여대 인문도시 사업단 커먼즈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 「공통체의 의미론」에서 윤영광이 제안한 commons의 번역어 ‘공통체’에 가장 동의가 많이 되는 편이다. 다만 우리의 논의에서는 번역어를 둘러싼 의미론 논쟁에 개입하는 것은 맥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기에 여기에서는 번역어 문제를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7) 현대 사회에서 커먼즈 담론 부상의 이론적, 실천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정영신(2020)을, 커먼즈 이론의 지형과 입장 차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권범철(2020)을 참조하라.

숲을 비롯한 자원 그 이상을 의미한다.

커먼즈에는 물론 온갖 유형·무형 자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특정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이 있다고 보고 이 두가지가 협쳐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다시 말해, 커먼즈는 자원+공동체+일련의 사회적 규약이다. 이 세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볼리어, 2018: 40)⁸⁾

핵심은 커먼즈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 그러한 자원 사용의 규칙,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결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커먼즈는 “자치, 자원 관리, 그리고 잘 살기를 위한 실질적인 패러다임”(39)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볼리어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수의 커먼즈 연구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정남영, 2017. 이승원, 2019)

더 밀고나가자면 커먼즈는 사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의 사물이며, 그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라 사물에 배태된 특정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 공동체, 규칙은 서로 독립한 실재들이 아니라 각자는 다른 것들이 없이는 커먼즈의 구성요인이 될 수 없는 것, 즉 이 세 가지가 서로를 전제 하면서 함께 모여야 작용할 수 있는 삼항일조(triad)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삼항일조로서의 커먼즈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의 새로운 조건으로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는 이 세 가지 계기들을 따라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2)인권의 조건으로서 커먼즈라는 실마리

먼저 공통자원(common pool resource)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커먼즈가 흔히 공유지로 번역되어 온 것이 보여주는 바는 커먼즈가 땅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땅, 하천, 산림, 바다, 도로, 대기 등등과 같이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나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적 자원에 기초한 커먼즈들이 존재한다. 이를 ‘자연 커먼즈’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커먼즈 활동가 및 연구자들은 이에 더하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컴퓨팅과 인터넷에 기초한 디지털 정보 등이 커먼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파악한다. 이를 ‘지식 커먼즈’ 내지는 ‘디지털 커먼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 커먼즈가 주로 전통 사회에서부터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전통적 커먼즈라면, 디지털 커먼즈는 비교적 근래에 생성되는 커먼즈라는 점에서 새로운 커먼즈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이승원, 2019.)

8) 인용한 글에서는 commons가 공유[재]로 번역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커먼즈로 음역한다. 인용한 부분에서 강조는 저자의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원들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제에서 물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 인권론의 용어, 혹은 국제 인권 레짐의 인권용어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자원에 기반해 있다. 자원들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정도, 그리고 그러한 소유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불평등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들을 커먼즈로 만들어 공통으로 사용으로 일은 삶의 질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는 그 원래의 의미인 살림살이(oikos)로서 경제적인 것의 문제이다. 삶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공통자원 개념은 생산방식의 문제에서는 연결된 협력적 생산⁹⁾,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의 소유권의 문제에서는 공유와 공동의 사용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공통자원의 관점에서는 경제체제의 핵심적 원리를 협력적 생산, 공유, 공용의 입장으로 설정한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상황, 즉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통자원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¹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의 공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 그러한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규칙들(communs protocols)이 중요하다. 그러한 규칙이 있어야 비로소 삶을 위한 자원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규칙들 역시 커먼즈를 이루는 핵심적 계기 가운데 하나이다.

커먼즈 사용의 규칙은 당연하게도 자원이 사적으로 독점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적으로 독점된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커먼즈에서 규칙이라는 계기는 인권론의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소유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의 입장을 제시한다.

근대 인권이론, 특히 자유주의 인권이론을 정초한 저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존 로크의 『통치론』 2부는 개인이 자기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신체를 사용하여 획득한 사물에 대해서도 개인은 소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자기 신체가 개인의 고유성/속성/소유/재산(property)인만큼 그 신체를 사용하여 획득한 사물도 그의 고유성/속성/소유/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소유(property)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 개인의 고유한 속성(property)를 부정하는 인권 침해가 된다.

이승원에 따르면 로크가 개인의 존립 근거로서 소유를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에서 공유지의 종획이 시작되고 공유자원의 공통적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2019) 로크는 절대군주가 독점한 정치권력을 탈독점화하는 이론적

9) 이 협력적 생산의 원리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커먼즈 운동 및 연구 진영 내부에서도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주목받는 커먼즈 기반 협력 생산 방식은 P2P 생산, 혹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다.

10) 이렇게 특정한 자원을 공통의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공통화 활동’(commoning)이라고 한다. 커먼즈를 공통화 활동의 효과로 파악하는 것은 재화의 속성에 기반하여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과는 달리 커먼즈를 특정한 자원들을 공통의 것으로 만든 실천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입장, 즉 커먼즈의 정치적 구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나 역시 커먼즈를 공통화 활동의 결과로 이해한다. 커먼즈와 공통화 활동, 즉 커먼즈의 정치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 더 논의하기로 한다.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커먼즈를 제거하고 금지하면서, 사적 소유권의 영역을 확장하는 또 다른 독점 과정”(2019:139)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커먼즈는 로크적 ‘소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소유의 권리와는 다른 소유의 권리를 보여준다. 과거의 커먼즈가 주로 국왕이나 귀족이 소유한 토지와 산림을 인민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커먼즈는 국가, 기업, 개인들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자원들을 탈독점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삶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공통적 사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유 규칙, 혹은 소유의 체제를 커먼즈는 지향하는 것이다. 이때 소유는 사적 소유 내지는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커먼즈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공통적 이용의 권리이다.(정영신, 2020.)

이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체(community)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커먼즈 운동과 연구 진영의 단일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커먼즈 구성의 핵심적 계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는 기본적인 동의가 있다. 왜냐하면 커먼즈의 구축, 관리, 사용의 주체는 사적 개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는 커먼즈의 주체이다. 그야말로 “공동체 없는 커먼즈는 없다.”(페데리치·카펜치스, 2020: 186)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페데리치와 카펜치스는 커먼즈에서 일차적인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고 주장한다. 이는 커먼즈의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갈등과 의견 충돌을 다루는 협력과 논의와 협상과 학습 작업에 많은 시간”(186)을 의지적으로 투여해야 함을 뜻한다. 협력과 논의, 협상과 학습 작업에 많은 시간을 의지적으로 들이는 것이 곧 공동체의 작동 과정이자 공동화 활동(commoning)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협력, 호혜관계, 그리고 자연적이거나 생산된 공유된 부의 재생산에 대한 책임”의 기반 위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질적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윤리에 입각하여 진행된다.(188)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즉 “풀뿌리의 힘, 아래로부터의 힘, 긍정된 역량에서 파생되는 힘, 그리고 수행해야 할 직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리더쉽과 권한을 갖는 의사결정”(188)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커먼즈의 구성과 운영은 물질적·비물질적 부 이전에 협력과 호혜적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개인들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즉 커먼즈의 관점은 권리, 혹은 인권의 주체를 자기완결적인 개인, 소유적 개인, 혹은 단자적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커먼즈의 권리 주체는 이미 그 자신만으로 충분한 권리 주체, 홀로서도 권리의 주체로서 완성된 로빈슨 크루스와 같은 개인이 아니다. 타인과의 협력과 호혜가 자기 권리의 내생적 조건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존재, 인간의 관개체적(transindividual) 성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독특한 개인들¹¹⁾이 커먼즈가 제시하는 인권의 주체이다.

11) 관개체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발리바르(2005)를, 관개체성의 인권론적 의미에서 대해서는 정정훈

(3)인권의 입장에서 커먼즈를 활용해보기

이상으로 살펴본 커먼즈의 특성과 그 인권적 함의는 커먼즈가 하나의 대안적 사회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커먼즈에 기초한 대안 사회의 형성이란 결국 현재의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혹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대안 사회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커먼즈론의 이러한 지향을 국제적 케인즈주의의 종언 이후 발생한 국제 인권 레짐의 위기와 그 극복의 방향이라는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비추어보자면, 그것은 인권 레짐의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창출 방향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즉 커먼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지구화 이후 위기에 처한 인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발전권선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발전권선언은 국제 인권 장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인권 규범들 가운데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가장 분명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문헌이다. 하지만 발전권선언 역시 그 규범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시되는 권리들의 추상성이 매우 높다.¹²⁾ 가령, 발전권선언은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 이러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그러나 이 인권의 증진 및 보호의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란 무엇일까? 발전권선언이 탈식민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도 제국주의의 효과로 인한 국제적 불균등 발전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어 사회복지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선언문임을 고려한다면, 이 선언문이 말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는 적어도 제국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 질서는 오늘날 어떤 것이어 할까?

현대 커먼즈 담론은 그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프로그램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의 정정 방향 역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비물질적 공통자원, 공유와 공통적 사용에 기초한 커먼즈 규칙, 그리고 개방과 이질성의 존중 및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공동체로 구성되는 커먼즈가 제도화된다면, 이는 발전권의 실현 과정, 즉 이익의 산출과 분배의 과정에서 개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될 수 있다.

(2014)를 참조하라.

12)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그 추상적 원리의 해석을 둘러싼 투쟁의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의 정치화 및 재구성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다양한 인권문헌들이나 헌법과 같은 공적 권리 문헌들에 내재하는 성격이다.

13)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직접 인용은 ‘인권하루소식’1775호(2005.2.22.)에 게재된 국역본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인권의 포괄적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발전권은 다양한 커먼즈들의 생산과 연결, 그리고 제도화를 그 구체적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천명하는 발전권선언은 커먼즈 운동이 국제 인권 레짐을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커먼즈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이승원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빈집·광장·나대지 등의 점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의 재구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역량 기반으로서의 커먼즈의 창조, 행성적 도시화를 벗어난 도시의 자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P2P 생산과 협력, 그리고 커먼즈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공공 예술 활동 등 수많은 도전적이고 민주적 실험은 새로운 권리 담론의 구성과 연결을 통한 보편적 인권을 보다 다양하고 상이한 집단에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다. (2019: 158)

커먼즈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실천들은 보편적 인권을 ‘다양하고 상이한 집단에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이 모든 인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부의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며, 삶을 위한 자원이 인민들의 주권에 입각해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발전권의 이념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발전권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가 추상적인만큼이나 커먼즈 운동 및 이론 역시 아직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커먼즈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볼로냐 규약’ 제정 활동이나 벨기에의 헨트(Ghent)시의 ‘헨트시 커먼즈 전환 계획’ 등은 현대 사회에서 커먼즈의 구축이 어떻게 실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¹⁴⁾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천된 커먼즈 기획들은 발전권이 더 현실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과 커먼즈의 동맹을 위하여

현대 커먼즈 이론에서 논의되는 커먼즈 개념은 ‘공통자원+규칙들+공동체’로는 도식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커먼즈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됨으로써 커먼즈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삼항일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항들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의미

14) ‘볼로냐 규약’에 대해서는 정영신(2022)를 참조하라. 헨트시 커먼즈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stad.gent/sites/default/files/page/documents/Commons%20Transition%20Plan%20-%20under%20revision.pdf>

를 가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으로서 공통자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커먼즈 규칙이 제시하는 공유와 공통 사용의 권리들, 그리고 인권의 주체를 단자적 개인이 아니라 협력과 호혜성에 기초한 연합의 관계 안의 주체로 파악하는 커먼즈적 권리주체론이 바로 커먼즈의 삼항이 가지는 인권적 함의라고 이 글은 파악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삼항 각각의 인권론적 함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삼항이 상호조건이 됨으로 구성하는 커먼즈 자체가 갖는 인권적 의미이다. 그것은 동시대 인권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사회경제적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커먼즈에 배태되어 있음을 뜻한다. 발리바르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의 동일성’(평등자유/égalité)이 인권의 정치라는 정치적 자율성을 구축한다면,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 자율성의 조건 내지는 타율성을 조성한다.(2007) 이 글은 인권의 정치가 ‘평등자유’를 실현하는 정치라면 그 정치의 조건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커먼즈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커먼즈의 핵심은 자원의 속성 그 자체에 앞서,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 질서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질서에 포획된 다양한 자원들을 공통화(commonification)하는 것에 있다. 커먼즈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커먼즈는 공통화 활동의 결과이다. 페데리치, 카펜치스, 데 안젤리스, 라인보우 등과 같은 급진적 커먼즈 이론가들에 의하면 공통화 활동은 자본이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에서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커먼즈란 언제나 투쟁을 통해 생산된다.”(권범철, 2020: 39) 아마도 이 투쟁의 결과에 따라 인권의 조건들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달성을 원하는 이들은 커먼즈를 구축하는 정치와 동맹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 17-49.
- 김세균. 2007.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연구』 2(4) : 82-100.
- 가이 스탠딩. 2021[2019]. 『공유지의 약탈』. 안효상 옮김. 파주 : (주)창비.
- 마크 프레초. 2020[2015]. 『인권사회학의 도전』. 조효제 옮김. 서울 : 교양인.
- 사스키아 사센. 2016. 『축출자본주의』. 박슬라 옮김. 파주 : 글항아리.
- 셸던 월린. 2013.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석영 옮김. 후마니타스.
- 실비아 페데리치. 2018[2012].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황성원 옮김. 서울 : 갈무리.
- 실비아 페데리치 · 조지 카펜치스. 2020[2019].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서 커먼즈」. 권범철 옮김. 『문화과학』 101 : 173-190.
- 에티엔 발리바르. 2005.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서울 : 이제이북스.
- , 2007. 『대중들의 공포』. 서관모 · 최원 옮김. 서울 : 도서출판b.
- 윤영광. 2022. 「커먼즈의 의미론」. 미공개 발표문.
- 장 자크 루소. 1999[1762]. 『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 237-260.
- , 2022.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ECO』 26(1) : 93-139.
- 정정훈. 2014. 『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서울 : 그린비.
- 조효제. 2018. “인권실현의 통합적 조건”. 『인권연구』 1(1) : 33-71.
- 지그문트 바우만.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 , 2010. 『모두스 비벤디』. 한성석 옮김. 후마니타스.
- 피터 라인보우. 2012[2008]. 『마그나카르타 선언』. 정남영 옮김. 서울: 갈무리.
- 하워드 파일. 2018[1883]. 『로빈 후드의의 모험』. 서미석 옮김. 파주 : 현대지성.
- Hall, Stuart. et al.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don : Palgrave.